

주간 통일정세

2016-5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17	北김정은, 김정일 5주기에 대규모 야외 추모행사(연합뉴스)
		北, 김정일 5주기 띄우기...사이렌에 목넘도(연합뉴스)
		北 김정일 5주기 띄우기...만수대 언덕에 추모행렬(연합뉴스)
		조선총련, 김정일 5주기 맞아 김정은에 편지(연합뉴스)
		北, 김정일 5주기 맞아 '제제 배격·체제 과시' 집중(연합뉴스)
	12.18	김정은, 왜 시찰때마다 단체사진?...“통치권 문제없다 과시용”(연합뉴스)
	12.19	北, '200일 전투' 공식종료 선언...“승리적 마무리”(연합뉴스)
		北 TV,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변경 확인(연합뉴스)
	12.20	김정은, 마식령 스키대회 관람...“국제경기서 우승해야”(연합뉴스)
	12.21	北 김정은, 방사포사격경기·야간습격비행훈련 참관(연합뉴스)
		“北, 국경경비대 물자공급 확대...불량식품 논란도”(연합뉴스)
		北, 中 거론하며 핵개발 정당성 주장...“번영의 기초는 핵”(연합뉴스)
	12.22	김정은, 평양시민에 물고기 수천톤 전달(연합뉴스)
		정보당국, 태영호 망명 책임 北보위성 간부 숙청설에 “확인 중”(연합뉴스)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 변화가로 이전(연합뉴스)
北, '200일 전투' 기간 어선 좌초로 6명 사망 보도(연합뉴스)		
12.23	“北, 부총리급 이상 고위직 30분 단위로 감시”(연합뉴스)	
	北, '대권도전 선언' 반기문에 “허황된 꿈” 비난(연합뉴스)	
	北 매체, 터널 붕괴 위험에도 속도전 앞장선 인부들 선전	
경제	12.18	北, 연말행사비 명목 가구당 일정액 징수...자금난 심각(연합뉴스)
	12.20	“작년 외국인 대북투자 8천300만달러...전년대비 30% 증가”(연합뉴스)
	12.21	“북한의 대 미국 수출 6년간 전무”(연합뉴스)
		“북한 수산물, 중국산 포장돼 美·日 수출...대북제재 허점 여전”(연합뉴스)
	12.22	KDI “평양 1인당 소득 2천700달러...북한 다른 지역 3배”(연합뉴스)
사회 문화	12.17	北, 수해복구서 부패·부실공사 간부 3명 체포...총살할 듯(연합뉴스)
	12.23	김정은 집권 5년...민생·대외관계 파탄(연합뉴스)
외교 국방	12.18	北, 장시간 비행 가능한 무인기 개발...시험비행 중(연합뉴스)
	12.19	日정부, 대북 단파방송 강화...주파수 2~3개로 확대(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 “北, 내년초 고강도 WMD 도발 가능성”(연합뉴스)
12.20	“北·日, 9~11월 중서 비공식 접촉…노동당 국제부가 협상창구”(연합뉴스)
	日, VOA·RFA와 연계해 대북 방송 강화(연합뉴스)
	美38노스 “北, SLBM 탑재가능 신포급 잠수함 기동훈련 나선 듯”(연합뉴스)
12.21	美, 유엔 주재 北외교관 금융제재 강화…“거래 특별허가 필요”(연합뉴스)
	北, 나토의 대북 규탄성명에 반발…“미국의 유럽 도구”(연합뉴스)
12.22	北 “아베의 진주만 방문은 평화 기만극” 비난(연합뉴스)
	北 “유엔 대북제재는 선전포고…남은 것은 전쟁뿐”(연합뉴스)
	“불가리아, 불법 외화벌이 한 北 대사관 조치 착수”(연합뉴스)
12.23	北 핵무장 초읽기…고강도 추가도발 나서나(연합뉴스)
	美국무부 “GDP대비 국방비지출 북한이 전 세계 1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2. 18.

■ 김정은, 왜 시찰때마다 단체사진?…“통치권 문제없다 과시용”(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들어 시찰(현지지도)에 나설 때마다 거의 매번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단체사진을 찍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림.
- 연합뉴스가 18일 북한 매체들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지난 9월 30일(이하 보도일 기준) 룡약산샘물공장 시찰 이후 총 25번의 공개활동 가운데 무려 20차례나 현지 관계자들과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음.
- 그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7차 노동당 대회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단체 사진을 찍었던 관행과는 다른 행보로 읽힘.

2016. 12. 20.

■ 김정은, 마식령 스키대회 관람…“국제경기서 우승해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마식령 스키경기 대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스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맞게 스키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날 김정은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리수용·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리일환·김용수 당 중앙위 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한광상 군 중장, 박정천 군 포병국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과 함께 경기를 관람함.

2016. 12. 21.

■ 北 김정은, 방사포사격경기·야간습격비행훈련 참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과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김정은은 인민군 연합 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를 참관하면서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포탄을 날릴 수 있게 준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은 이날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리영길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동행함.

■ “北, 국경경비대 물자공급 확대…불량식품 논란도”(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국경경비대에 공급하는 물자를 늘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경경비대의 식생활 실태를 보고받은 김정은이 ‘경비대 병사들은 사상전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전초병’이라고 치켜세우며 중국 사람들 부럽지 않은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이 소식통은 “지시에 따라 인민군 후방총국은 동계훈련이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국경경비대의 식생활에 필요한 후방물자 공급을 크게 늘렸다”며 “국거리용 다시마와 저녁 식사 때 병사들에게 두 마리씩의 도루묵이 차례지도록(배당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임.

2016. 12. 22.

■ 김정은, 평양시민에 물고기 수천톤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 수산사업소에서 잡은 물고기를 평양 시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다”며 “21일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고기들을 가득 실은 차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누비며 달렸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인민군대 안의 수산부문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은 철야 전투를 벌여 제일 크고 물 좋은 수천 톤의 물고기를 골라 평양시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2. 22.

■ **정보당국, 태영호 망명 책임 北보위성 간부 숙청설에 “확인 중”(연합뉴스)**

- 우리 정보당국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북한 해외 엘리트층의 한국행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성 간부들을 숙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짐.
-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 파견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에 대한 책임으로 보위성의 조직부부장(차관급)과 해외반탐국 국장 2명, 과장급 4명 등이 숙청됐다는 설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힘.
- 앞서 태 전 공사 등 해외 근무 간부의 망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북한 내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보위성이 갈등을 빚다가 김정은이 조직지도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위성 간부 7~8명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숙청됐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음.

2016. 12. 23.

■ **“北, 부총리급 이상 고위직 30분 단위로 감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부총리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이 외출하면 인민보안성 등이 30분 단위로 보고하는 감시체제를 운영한다는 탈북자의 주장이 제기됨.
- 김태산 전 조선체코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고위직 인사가 외부 지도사업을 나가면 1시간 단위로 보고된다”면서 “특히 총리나 부총리 급에 대한 감시내용은 지방 당,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3대 혁명소조 등 네 개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보고한다”고 말함.
- 국가안전보위성 출신 다른 탈북자도 “총리급 이상 인사들의 하루 일정은 시시각각 중앙당 조직지도부로 보고된다”고 전함.

다. 공식행사

2016. 12. 17.

■ **北김정은, 김정일 5주기에 대규모 야외 추모행사(연합뉴스)**

- 북한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주기를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대규모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일 5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거행됐으며 오후 3시 30분(평양시각 오후 3시)께부터 녹화 실황을 중계함.

-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정은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옥외 주석단에 자리함.

■ 北, 김정일 5주기 띄우기...사이렌에 묵념도(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를 맞아 정오 추모 사이렌에 맞춰 주민들이 일제히 묵념을 하도록 하는 등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섬.
-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 30분(평양시각 정오) 3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평양 시내 김일성광장 주변에 차량과 전차가 멈춰 서고 대동강변에 선박들이 정박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묵념하는 장면을 내보냄.
- 조선중앙TV는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특별방송을 통해 이 같은 평양 시내 추모 의식을 생방송했고, 평성·신의주·함흥 등 전국 곳곳의 묵념 장면도 방영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2. 17.

■ 北 김정일 5주기 띄우기...만수대 언덕에 추모행렬(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오전 8시 30분(평양시각 오전 8시)부터 3분 동안 간판 앵커 리춘희의 추모사 낭독을 방영함.
- 리춘희는 추모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우리 (김정일) 장군님은 사랑하는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한평생 야전 열차를 집 삼아 위대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눈보라 강행군 길을 헤쳐가시었다”고 주장함.

■ 조선총련, 김정일 5주기 맞아 김정은에 편지(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를 맞아 1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총련은 김정일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로 찬양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교시를 철저히 관찰해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겠다고 다짐함.
- 중국 내 북한 출신 교포들의 민간단체인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도 이날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냄.

2016. 12. 19.

■ **北, '200일 전투' 공식종료 선언...“승리적 마무리”(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함.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궐기, 총매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전개하여온 200일전투가 12월 15일 승리적으로 결속(종료) 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함.
- 당 중앙위는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결코 평화로운 환경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역사에 유례없는 큰물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고도 200일전투의 각 방면에서 방대한 전투 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것은 장쾌한 기적적 사변”이라고 자평함.

■ **北 TV,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변경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명칭을 ‘국가보위성’으로 변경한 것으로 19일 확인됨.
-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의 여자 아나운서는 지난 18일 '온 나라에 태양의 모습 빛나도록 해주시여'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에서 각지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에 얽힌 일화를 전하면서 ‘국가보위성에 모신 아버지 장군님의 동상’이라고 말함.
- 앞서 인민무력부와 인민보안부의 명칭이 각각 인민무력성과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된 것은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보위성으로 바뀐 사실이 매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12. 22.

■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 변화가로 이전(연합뉴스)**

-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이 변화가로 이전된 사실을 북한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싱가포르 출신 사진작가 아람 관 씨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함.
- 새 대사관이 위치한 곳은 싱가포르 의회 및 대법원과 가깝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현지 부동산 사이트 검색 결과를 근거로 건물 임대료가 월 23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일 것으로 추산함.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NK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전 이유에 대해 “앞서 대사관이 있던 건물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17.

■ 北, 김정일 5주기 맞아 '제재 배격·체제 과시' 집중(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주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배격하고 체제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함.
- 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정일의 대형 사진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열어주신 최후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실음.
- 사설은 "(김정일 사후) 지난 5년은 시련의 엄혹성과 투쟁의 간고성, 이룩한 승리의 크기와 풍부성에 있어서 몇십 몇백년(이나) 맞잡이(마찬가지)였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최상의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자찬함.

2016. 12. 21.

■ 北, 中 거론하며 핵개발 정당성 주장...“번영의 기초는 핵”(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을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핵개발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는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한 핵강국으로 된 후 중국은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말함.
- 논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맞서려면 전략 핵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중국 관영 매체의 최근 논평을 인용, "미국의 핵위협 공갈을 받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기초, 평화보장의 담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국 매체의 논평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 그것은 명실 공히 핵무력강화이다"라고 덧붙임.

2016. 12. 22.

■ 北, '200일 전투' 기간 어선 좌초로 6명 사망 보도(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진행한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달

- 말 어선 한 척이 평안남도 해상에서 좌초돼 선원 6명이 모두 숨진 사실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뒤늦게 알려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금속건설사업소 수산부업작업반 표-안-9124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어선 ‘표-안-9124호’(이하 9124호)의 사고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9124호를 비롯한 수산부업작업반의 어선들은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 앞바다에서 어로전투(조업)를 하고 있었음.

2016. 12. 23.

■ 北, ‘대권도전 선언’ 반기문에 “허황된 꿈”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허황된 꿈을 꾸다”며 인신공격에 나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인두겁을 쓴 카멜레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 총장이) 고별회견이라는 데서 대권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난함.
- 이 매체는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에 대한 외신의 비판 등을 거론하며 “비난과 오명 속에 살아가는 주제에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으니 이 어찌 허황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함.

■ 北 매체, 터널 붕괴 위험에도 속도전 앞장선 인부들 선전

- 북한은 속도전 사업으로 내세운 ‘200일 전투’기간 황해남도의 한 수로 공사 구간에서 인부들이 목숨을 걸고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에 진입해 작업한 사실을 선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울린 또 하나의 자랑찬 승전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해남도 1단계 수로 공사구간에 동원된 인부들의 작업 실태를 상세히 보도함.
- 노동신문은 “물길 건설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었다”면서 “돌격대원들에 의해 일정계획보다 3.5배에 달하는 공사속도를 기록하였다”고 덧붙임.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12. 18.

■ **北, 연말행사비 명목 가구당 일정액 징수…자금난 심각(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지난 11월부터 가구당 일정액을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전함.
- 요미우리는 이날 ‘김정은 체제 흔들리는 충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11월께부터 모든 가구에서 1호(戶)당 0.7달러(약 83엔)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83엔은 우리 돈으로는 830원 정도였으나 북한 돈은 미 달러화로는 공식환율이 1달러에 110원 정도, 시장환율로는 8천300원 정도로 최근 추산됨.

다. 경제 상황

2016. 12. 22.

■ **KDI “평양 1인당 소득 2천700달러…북한 다른 지역 3배”(연합뉴스)**

- 북한의 실질 소득수준을 추정해 결과 평양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천700달러 내외로 여타 지역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20~5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공식적으로는 10명 중 9명에 달하지만 실제 이중 절반 이상은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고서는 “실질취업자는 물론 소득에서까지 평양은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점하는 지역”이라고 평가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2. 20.

■ **“작년 외국인 대북투자 8천300만달러…전년대비 30% 증가”(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수입액이 8천300만달러(약 986억 원)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근 통계보고서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VOA는 “이런 규모는 2014년의 약 6천300만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라며 “북한에서 2012년 2억2천만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2013년에 약 8천300만 달러로 크게 줄었고, 이어 2014년에도 줄어든 뒤 지난해 증가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북한을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다. 2015년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50억달러(약 5조9천410억원)로, 북한의 6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2016. 12. 21.

■ **“북한의 대 미국 수출 6년간 전무”(연합뉴스)**

- 북한의 대 미국 수출이 6년 연속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VOA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북한의 대미 수출이 전무했다”며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약 14만달러(약 1억6천700만원)로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이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고 밝힘.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주류 또는 음료’, ‘가공된 가금류’, ‘실험실 연구장비’, ‘상업용 인쇄물’ 등이었음.

■ **“북한 수산물, 중국산 포장돼 美·日 수출…대북제재 허점 여전”(연합뉴스)**

-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을 거쳐 미국과 일본까지 유통돼 유엔과 서방의 대북제재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옌지발 기사에서 중국산으로 포장된 북한산 명태가 이곳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도함.
- 옌지 서부시장의 상인 15명은 중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명태가 북한 국경에서 북한 도매상과 거래하는 중국인 도매상에게서 사 온 것으로, 중국에서 가공·포장해 대부분 중국에서 팔린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2. 17.

■ **北, 수해복구서 부패·부실공사 간부 3명 체포…총살할 듯(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200일 전투'의 핵심인 함경북도 수해복구 과정에서 부패를 저질렀거나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 3명을 체포해 총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4일 이 방송에 200일 전투에 대한 총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투 기간에 부패 혐의로 체포된 간부들은 총화 마지막에 공개총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이 방송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함경북도 도 인민위원회 간부 2명이 수해복구에 지원된 시멘트 32t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총화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2. 23.

■ **김정은 집권 5년…민생·대외관계 파탄(연합뉴스)**

- 김정은은 집권 후 줄곧 공포통치를 통해 자신의 '1인 지배체제 구축'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가차 없이 숙청하는 한편 핵·경제 병진노선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권력 기반을 구축해옴.
-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지난해 6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대북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명분의 이러한 속도전 사업은 슬한 부작용을 낳았으며, '70일 전투' 기간에만 5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옴.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2. 21.

■ 美, 유엔 주재 北외교관 금융제재 강화…“거래 특별허가 필요”(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함.
- 미 재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이 금융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를 할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General License 1-A)를 받도록 함.
- 미국 은행들은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주재 외교관이나 가족들에게 계좌 개설, 자금 거래, 대출 확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6. 12. 19.

■ 日정부, 대북 단파방송 강화…주파수 2→3개로 확대(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북 단파방송 주파수를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 ‘후루사토노 가제(고향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대북 단파방송을 시작함.
-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납치당한 1970~1980년대 일본 유행가 등을 심야에서 새벽 사이 3차례에 걸쳐 30분씩 방송하고 있음.

2016. 12. 20.

■ “北·日, 9~11월 中서 비공식 접촉…노동당 국제부가 협상창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 노동당 국제부 측과 지난 9~11월 3개월간 중국 지방도시에서 적어도 3회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수의 북일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전함.

- 교도통신은 “일본에선 외무성 담당자가 참석한 듯하지만, 북한에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를 파견, 기존 외무성 간 협의와는 다른 경로로 (논의) 재개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접촉해,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타개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9월 초 중국 동북부 내륙도시에서 접촉했으며 북한이 같은 달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인 10월 초와 11월 초에는 중국 남부 항구도시에서 접촉함.

■ 日, VOA-RFA와 연계해 대북 방송 강화(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소리(VOA) 및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위한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들 방송국과 방송 내용과 빈도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대북 방송을 시작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위한 단파 라디오 방송 ‘후루사토노 가제(고향의 바람)’을 해 오고 있음.

2016. 12. 22.

■ 北 “아베의 진주만 방문은 평화 기만극”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들을 위령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추악한 평화 기만극”이라고 22일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아베는 진주만 행각(방문)을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침 야망, 지배주의 야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일본 집권자는 진주만 행각 시에 미국에 사죄 한마디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한다”면서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죄하는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도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강점정책, 실행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륜범죄들에 대해 모두 사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2. 21.

■ 北, 나토의 대북 규탄성명에 반발…“미국의 유럽 도구”(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NAC)가 최근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미국의 ‘유럽도구’인 나토가 분수(분수) 없이 높아대고 있다”며 반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북대서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가 조선(북한) 문제에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논평은 또 이번 나토의 성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그릇된 주장”을 되받아 외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세를 모르고 주권이 없으면 머저리 취급을 받기 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2016. 12. 22.

■ 北 “유엔 대북제재는 선전포고…남은 것은 전쟁뿐”(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2321호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조약법규국장은 담화를 통해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에는 평화로운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규제돼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반인륜범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약법규국장은 이어 “이번 안보리의 제재결의로 조선반도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로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함.

■ **“불가리아, 불법 외화벌이 한 北 대사관 조치 착수”(연합뉴스)**

- 불가리아 정부가 불법 외화벌이 의혹이 제기된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 임대 활동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불가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새로운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힘.
- 아울러 VOA는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 2321호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10월 이집트를 떠나 북한으로 귀국했다면서 박 대사는 불법 무기 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고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2. 18.

■ **北, 장시간 비행 가능한 무인기 개발...시험비행 중(연합뉴스)**

-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기존 무인기보다 체공 시간이 늘어난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 중인 사실이 확인됨.
-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장시간 비행 무인기를 개발 중인 사실을 지난 14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함.
- 당시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김책공업대학의 ‘200일 전투’ 연구사업 성과 소식을 전하면서 장시간 비행 무인기 모형과 함께 비행 사진을 공개함.

2016. 12. 19.

■ **아산정책연구원 “北, 내년초 고강도 WMD 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됨.
-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2016. 12. 20.

■ **美38노스 “北, SLBM 탑재가능 신포급 잠수함 기동훈련 나선 듯”(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의 해상 기동훈련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으며, 또 신포급보다 더 큰 잠수함 제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테스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지난 9일 자 상업용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신포급 또는 ‘고래급’으로 불리는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이 위장망을 걷어낸 채 함경북도 신포의 전용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함.
- 그는 잠수함의 남서쪽에 미사일 수중발사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이 있었지만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옮기는 데 쓰였던 소형 선박들은 모습을 감췄다며, 잠수함이 이미 기동훈련을 했거나 곧 바다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2016. 12. 23.

■ **北 핵무장 초읽기…고강도 추가도발 나서나(연합뉴스)**

-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t 이상의 핵탄두를 500~600kg으로 줄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화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척됐으나 아직 완전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평가임.
-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kg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해왔으나 5차례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전량 또는 일부 사용했다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양을 더 늘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무부 “GDP대비 국방비지출 북한이 전 세계 1위”(연합뉴스)

- 전 세계에서 경제적 능력에 비교해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 북한이라는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발표됨.
-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북한은 23.3%로 1위에 올랐음.
- 북한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7.9%를 기록하며 에리트레아(8.1%)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2위에 오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17		케리, 트럼프 행정부에 對한국정책 계승되도록 노력(연합뉴스)
	12.19	윤병세 장관, 오후 미국 하원 여야의원들 면담(연합뉴스)	
	12.21		‘나토모델’ 한·미확장억제협약체 출범...트럼프 의지 관건(연합뉴스)
			트럼프 NSC보좌관 플린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22		日외무상 “한국군 독도방어훈련 매우 유감” 주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19	트럼프 “中, 흠친 드론 반환 불필요”… 갈등 장기화 가능성(연합뉴스)	
	12.20		중국, 나포한 미군 수중 드론 반환 (연합뉴스)
	12.21		중국 매체, 美 수중드론 반환에 “미국 반성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19	주일미군, ‘오스프리’ 비행재개…오키나와 “식민지나” 강력반발(연합뉴스)	
	12.22	미·일정상 진주만서 ‘화해’ 강조…아베, 전쟁 ‘사죄’는 안할 듯(연합뉴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부 日에 반환… 주민반발 여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19	미국 민주당, 러시아 개입으로 대선 왜 곡…의회에 진상조사 요구(연합뉴스)	
	12.21	美재무부, 對러시아 경제제재 확대… 러시아, 보복 경고(연합뉴스)	
	12.23	美장성 “러시아, 시리아를 사격 훈련 장으로 이용” 맹비난(연합뉴스)	트럼프·푸틴 “핵능력 강화”…냉전 ‘핵경쟁 망령’ 부활 우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2. 17.

■ 케리, 트럼프 행정부에 對한국정책 계승되도록 노력(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내달 20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의 대 한국 정책에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한국시간 17일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15분 간 진행한 통화에서 “후임 국무장관을 포함, 차기 행정부팀에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그간의 성과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한 인계인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케리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굳건하게 유지돼왔다”며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2016. 12. 19.

■ 윤병세 장관, 오후 미국 하원 여의의원들 면담(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가 밝힘.
- 윤 장관은 하원 규칙위원회 위원장인 피트 세션스(텍사스) 공화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여야 의원단(공화당 4명·민주당 2명)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함.
- 윤 장관은 내달 20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는 한편, 탄핵 국면에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2016. 12. 21.

■ ‘나토모델’ 한·미확장억제협약체 출범…트럼프 의지 관건(연합뉴스)

- 한·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이하

-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견고한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임.
 - 임성남 차관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토대로 해서 확장억제 협의를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회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잇는 한미 안보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트럼프 NSC보좌관 플린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은 20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굳건하며, 잘 구축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플린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표단이 전함.
- 그는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트럼프 정부도 강력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2016. 12. 22.

■ 日외무상 “한국군 독도방어훈련 매우 유감” 주장(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 해군이 전날 연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해군의 독도 훈련은)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추어 볼때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함.

- 앞서 일본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전화로 항의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2. 19.

■ 트럼프 “中, 훔친 드론 반환 불필요”...갈등 장기화 가능성(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수중 드론’ 갈등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나섬.
- 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도록 놔두라”고 썼음.
- 미국 국방부가 중국 당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중국이 압수한 미국 무인 수중 드론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트윗임.

2016. 12. 20.

■ 중국, 나포한 미군 수중 드론 반환(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15일 나포한 미국 해군 수중 드론을 20일 미국 측에 반환함.
-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 양국간 우호적으로 협의한 결과 20일 남중국해 관련 수역에서 미군의 수중 드론을 돌려줬다”고 밝힘.
- 미 국방부도 중국이 지난주 나포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반환했다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2016. 12. 21.

■ 중국 매체, 美 수중드론 반환에 “미국 반성해”(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 해군의 무인 수중 드론을 돌려준 뒤에도 양국 간에 책임론이 불거지

- 자 중국 매체들이 미국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섬.
-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남중국해에서 정찰 활동을 해온 만큼 이번 사건은 긴장 조성을 유발한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임.
- 관영 환구시보는 21일 '수중 드론 사건 해결, 미·중 누가 반성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사평에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6. 12. 19.

■ 주일미군, '오스프리' 비행재개...오키나와 "식민지냐" 강력반발(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 현 주둔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비행을 둘러싼 미군과 현지 지자체·주민간의 갈등이 확산 양상임.
- 1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지난 13일 밤 오키나와현 나고시 동쪽 해상에서 오스프리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이후 취했던 비행중지 계획을 이날 오후 전면 해제하기로 함.
- 이에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오키나와를 식민지로 아느냐", "사고 발생 1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비행재개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2016. 12. 22.

■ 미·일정상 진주만서 '화해' 강조...아베, 전쟁 '사죄'는 안할 듯(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찾아 발표하게 될 메시지의 주제는 '화해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말함.
-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힘.
- 그는 또 두 사람의 진주만 방문 일정에는 구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살아남은 퇴역군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양측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함.

■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부 日에 반환...주민반발 여전(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일부가 22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반환됨.
- 이날 반환된 곳은 오키나와 현에 있는 주일미군 최대 시설 호쿠부 훈련장 총면적 7천800ha의 절반이 넘는 4천ha 규모임.

-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오후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관저에서 만나 호쿠부훈련장 일부 반환 사실을 공동 발표.

다. 미·러 관계

2016. 12. 19.

■ 미국 민주당, 러시아 개입으로 대선 왜곡…의회에 진상조사 요구(연합뉴스)

- 미국 연방수사국(CIA) 등 정보 당국이 지난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섬.
-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도나 브라질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공격의 주요 희생자 중의 한 당사자로서 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해 철두철미하고 독립적이며 초당파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의회에 발송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함.
- 그는 "러시아의 침범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미국이 외세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2016. 12. 21.

■ 美재무부, 對러시아 경제제재 확대…러시아, 보복 경고(연합뉴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기존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확대함.
-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대상에 러시아 은행가와 기업인 7명, 8개 기업을 추가했다고 발표함.
-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7명의 인사는 방크 로시야와 소빈 방크 등 기존에 제재를 받았던 기업의 임원 출신 6명과 러시아 국방부와 대규모 거래를 한 기업가 1명 등임

2016. 12. 23.

■ 美장성 “러시아, 시리아를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 맹비난(연합뉴스)

- 미군 장성이 러시아가 시리아를 사실상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섬.
-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 벤 호지스 중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실행할 기회로 삼고 있다”며 “민간인 살상

을 경시하는 것은 초강대국으로 대우받기 바라는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함.

-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작년 9월 시리아 내전에 군사개입을 시작한 이래로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에 의해 반군 3만5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트럼프·푸틴 “핵능력 강화”…냉전 ‘핵경쟁 망령’ 부활 우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확장하겠다고 밝힘.
-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 강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곧장 맞불을 놓은 것임.
- 미·러가 과거 냉전 시대의 핵무기 경쟁 체제로 재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17	미국무부, 북한 인권제재 2차 명단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연합뉴스)
	12.19	“불잡힌 탈북민 이송 중 영양실조로 죽자 야산에 묻었다”(연합뉴스)
	12.20	유엔총회 1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3년연속 ICC 회부 권고(연합뉴스) 北인권결의 3년 만에 무투표 합의 채택...해외노동자 첫 언급(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2.19	인권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회의 개최(연합뉴스)
	12.22	통일부, 내년부터 입국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 전수조사(연합뉴스) 이산가족 76% “전면적 생사확인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19	태영호 “김정은 폭압통치에 귀순 결심”...23일부터 사회활동(연합뉴스)
대북지원	12.21	“북한 올해 곡물생산량 7% 증가...식량 부족은 여전”(연합뉴스)
	12.22	유진벨재단 “정부, 결핵 치료약 대북 반출에 난색”(연합뉴스)
	12.23	통일부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신청 긍정 검토”(연합뉴스) “올해 국제사회 4천930만 달러 대북 지원...작년보다 13% ↑”(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2. 17.

■ 미국무부, 북한 인권제재 2차 명단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제재 2차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LK)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법률에 따라 현재 새로운 (제재) 대상자들을 간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버스비 부차관보는 앞서 지난 10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제재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음.

2016. 12. 19.

■ “불잡힌 탈북민 이송 중 영양실조로 죽자 야산에 묻었다”(연합뉴스)

- 탈북자단체가 주최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증언 청취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적나라한 인권 유린 실태가 폭로됨.
-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ICC 제소, 북한인권 가해 사실 증언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북한 철도보안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인권 유린 사례를 진술함.
- 김 대표는 탈북하려다 붙잡혀 러시아에서 복송된 사람들을 호송할 때 그들의 두 손에 족쇄를 채우는 등의 행위에 동참했고 열차로 이송 중인 교도소 수감자 10여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바로 묻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함.

2016. 12. 20.

■ 유엔총회 1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3년연속 ICC 회부 권고(연합뉴스)

-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함.

-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함.
- 이에 따라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지막 남은 절차도 마무리함.

■ 北인권결의 3년 만에 무투표 합의 채택...해외노동자 첫 언급(연합뉴스)

-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는 2013년 이래 3년 만에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됨.
-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투표없이 합의로 채택되기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임.
- 이는 북한 지도부의 인권 유린 자체 뿐 아니라 올해 2차례 핵실험과 24회의 각종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여론의 우려와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2. 19.

■ 인권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회의 개최(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호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16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힘.
- 회의에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 인권정책을 전망하고 북한인권법 통과 후 본격화한 우리나라의 대북 인권정책 등을 논의함.

2016. 12. 22.

■ 통일부, 내년부터 입국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 전수조사(연합뉴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내년부터 입국하는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함.

- 통일부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 방안을 확정하고, 설문지 설계와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했으며, 본 조사에 대비해 11월 29일 예비조사와 12월 12~13일 전수 시범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힘.
-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출범함.

■ 이산가족 76% “전면적 생사확인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연합뉴스)

- 국내 거주 이산가족 10명 중 8명가량이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통일부가 22일 발표한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5만1천17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6천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이산가족 관련 민간교류 허용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함.
- 구체적으로 보면 ‘당국 차원에서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되, 민간교류도 허용’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민간교류의 활성화 필요’가 24.6%, ‘민간교류를 제한해 당국 차원의 교류 촉진’이 20.9%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2. 19.

■ 태영호 “김정은 폭압통치에 귀순 결심”…23일부터 사회활동(연합뉴스)

-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9일 “북한 김정은의 폭압적인 공포통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체제에 대한 환멸감이 커져 귀순 결심을 굳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태 전 공사와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국회 정보위 이철우 위원장, 여야 간사와 간담회에서 “태 전 공사가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발전상을 체감하게 됐다”고 이 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함.
-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자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무서워 도주했다고 비난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모략할 줄 알고

귀순 전에 대사관 내 자금 사용 현황을 정산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왔다”고 주장함.

5. 대북지원

2016. 12. 21.

■ “북한 올해 곡물생산량 7% 증가·식량 부족은 여전”(연합뉴스)

- 북한의 쌀 등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농촌진흥청은 21일 북한 지역의 기상, 병해충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원격 탐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2016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 발표함.
-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481만으로, 지난해(450만 추정)보다 약 7% 증가함.

2016. 12. 22.

■ 유진벨재단 “정부, 결핵 치료약 대북 반출에 난색”(연합뉴스)

-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최근 우리 정부에 약품과 물품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힘.
- 스티븐 린튼 재단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말함.
- 그는 “지금(북한 내 중증결핵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책을 떠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교류는 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함.

2016. 12. 23.

■ 통일부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신청 긍정 검토”(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최근 신청한 결핵약 대북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하지만 통일부는 이 단체의 병동 건축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단체는 12월 20일에 결핵치료 의약품과 병동 자재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함.

■ **“올해 국제사회 4천930만 달러 대북 지원…작년보다 13%↑”(연합뉴스)**

- 올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총 4천930만여 달러(593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밝힘.
-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집계한 국제사회의 올해 대북 인도지원액 4천590만 달러에 중국·태국 등 개별 국가의 발표를 반영해 이같이 추산함.
- 방송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나라는 스위스,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인도,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태국 등 12개국임.